

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2016년9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2

(10시0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바, 이는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동북아시아 지역 및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하고 무모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 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 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핵 포

기를 위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관영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두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로 통합 조정된 원내교섭단체의 의결을 거친 이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두 위원회에서 각각 2건의 안이 제안될 상황이었지만 2건을 원내수석 간에 서로 통합 조정해서 1건으로 조정해서 오늘 수정안으로 부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3인으로서…… 기권 3인으로서, 반대는 없습니다. 김관영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권선·영통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니다. 먹고살 걱정하랴 노후 걱정하랴 민생 불안, 원전 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안전 불안, 김정은의 무모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까지 겹쳐서 국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컸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야만 경제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박만으로는 고립과 자멸을 자초할 뿐 결코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은 김정일 집권 17년 5개월 동안 두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김정은 집권 4년 9개월 동안 세 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실험 주기도 3년에서 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네 차례하고는 달리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무수단·SLBM 미사일 등 3종 세트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까? 경량화·소형화·다종화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어서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표 의원** 그러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 종류의 핵실험을 했고 소형화 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68주년인 9월 9일 9시에 맞춰

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비롯하면서 보란 듯이 핵무장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핵실험에 앞서서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를 사전에 포착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미국 당국과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기간 동안에 합동참모본부 근무자 절반이 전투휴무 상태였고, 총리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두 서울을 비웠다가 춘각을 다뤄야 할 NSC가 핵실험 2시간 만에 지각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북한의 핵 도발 직후부터 저를 비롯해서 정부가 움직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NSC 회의를 했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표를 또 드렸고 이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김진표 의원**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 기상청으로부터 핵실험 사실을 통보받는 군과 정보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의 정보 무능 사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4월 SLBM 수중발사를 성공했을 때에도 국방부는 공중점화 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폄하했다가 넉 달 뒤 추가실험 때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정보 판단 착오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방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 어젯밤 JTBC 보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의원** 지난 7월 7일 NSC 상임위원회

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군정과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사드 배치와 같이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날 국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에 참석하고 차관이 NSC에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건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요식행위, 들러리만 설 것이기 때문에 차관을 대신 보냈다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네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의에 주무장관이 빠졌다, 그것도 모자라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외교장관을 봤다는 국방장관, 오전에 열렸는데 오후에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답하는 외교장관, 정식 멤버는 다 참석했다고 말하는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3단계 사드 배치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1단계로 평시에는 사드 기지만 구축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시에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 등을 통해서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3단계로 '데프콘 3'와 같은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에는 사드 포대를 조기 전개하는 것입니다.

장관, 최근에도 주일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드 3단계 배치론도 이처럼 실현 가능한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그러한 3단계 배치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적 배치보다는 사드를 직접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사드 3단계 배치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결코 이것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요. 동시에 북핵 제재에 중국의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내려면 단계적 배치론으로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국방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의원**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대응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물속에서도 쏘고 고속도로 터널에 숨었다가 나와서 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습니다.

북한의 표현대로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올려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총리, 방어 위주로 짜인 작전계획과 무기체계,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독자 핵무기 개발론 이것은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경제 제재, 원전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에너지 수급 현실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폐기에 따라서 겪게 될 상시적인 블랙아웃,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야기하는 핵 도미노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

다.

따라서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노력하는 이런 기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91년도 12월에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 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상실하는 등 잃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북핵 능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한미 동맹의 방어력만 현상 유지시킬 수 있는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북핵에 대해서 제한적 방어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응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최근 북핵 위험 상황을 핵 사용 위협, 핵 사용 압박, 핵 사용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음 달에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의제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지금 이대로는 우리의 안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면 차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2020년 이후에야 전략화하기로 예정된 킬체인, KAMD 완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병커버스터를 탑재한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대응 전략을 한미 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간이 금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해보다 2.1%나 증가했고 북한에 핵 개발 물자를 제공한 중국 기업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난 4차 핵실험 때 안보리결의 2270호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리, 이번 5차 핵실험 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규 결의에는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조치에 일부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수출입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필요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기타 신규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제재만으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실상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을 봉쇄·압박하는 평화 지키기 전략, 이 시점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 전략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NPT 탈퇴, 미사일, 핵실험 등 위기 때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북미 회담 합의, 약속 불이행, 다시 위기고조 이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연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틀림없이 북미 대화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와 함께 4자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주도적인 전략,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주한미군 주둔을 일정 기간 보장을 받아 내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 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다른 나라에는 북핵 문제가 어떤 전략의 균형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전략으로 대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우리나라

에는 생존이 걸린 아주 숙명적 과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30 대 1의 남북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 보다 담대한 리더십,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등을 통한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핵 제재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접근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 압박, 더 강화돼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마지막 해결은 대화와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튼튼한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DIME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박근혜정부 때 두 차례, 북한 핵실험 다섯 번 중 네 번이 보수정권 8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말 폭탄만 쏟아 내는 안보 무능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안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예산입니다. 참여정부 국방예산은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5% 안팎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 미국

대선 변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지 상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당론으로 좀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40배 커도 우리보다 40배 작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억제력이 무너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10년간 우리는 협상·제재 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위기를 이겨 내는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또 중국과의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머뭇거리서는 안 됩니다. 이참에 북한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어막인 사드 배치조차 제대로 못 하는 취약해진 대한민

국 안보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는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10일 일본 교토에 있는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를 직접 가서 보고 거주민들과 만나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처럼 선동하는가 하면 대안 없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핵 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단합된 힘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국가 지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북한 핵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 핵은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고 비핵전에서의 상황은 우리 한미 동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격멸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철우 의원 만약에 핵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우 의원 그것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부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북한이 없어진다면 우

리의 피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우리의 가용 능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핵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개념과 그런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과 계획하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제가 모두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한다든지 전술핵이라든지 선제공격이라든지 북한 정권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하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을 당장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시다마는 우리의 동맹의 군사적 능력 그리고 정치, 정보, 외교, 경제, 이러한 능력을 포함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아니, 억제를 하는데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방어막은 사드 배치라고 국방부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린 것 가운데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한 그런 표현 속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한 미군이 제공하는 능력, 이런 방어 능력이 일차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지금 지역에서는 사드가 들어오면 지역이 망하는 것처럼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황폐화되고 사막화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주가 최적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우리 총리님하고 장관님이 가서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3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지역을 검토하면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3개 지역에 대한 부지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지금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에 있는 현재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그 포대에 있는 레이더는 적 항공기 식별 및 요격을 위한 기능을 하는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한 50년가량 유지하고 있는 그런 레이더고, 새로이 주한미군이 전개하여 배치할 레이더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의 영향,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레이더, 그것은 중저고도 레이더고 지금은 고고도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전자파 영향이 적게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해서 실제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성산포대에서 쓰는 그런 레이더나 저희들이 실측을 해 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거기서 물러서 나오느냐, 이게 국방부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제3 후보지를 정하면 같은 성주 땅이지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는 롯데 CC에 오면 사실상 김천 담벼락에 오기 때문에 김천 지역을 레이더가 비춘다, 이래서 지금 김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7km 떨어져 있습니다, 롯데 CC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혁신도시에 공기업을 올 때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10년, 20년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애들이 병이 생기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웃에 있는 그 순수한 농민들도 이 레이더가 오면 모든 과일도 사드 과일이 되고 또 사막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에 떨면서 현수막이 온 시내를 뒤덮고 있어서 정말 사드는 괴물로 등장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사드는 북한의 남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사드 운영금 수조는 국민의 혈세다’, ‘사드 옆에서 아이 못 키운다’ 그 다음에 ‘인정 안 된 사드 즉각 철회하라’, ‘사드 포도다, 사드 자두다’, 이렇게 막 현수막이 정말로 저것을 보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수막의 내용 각각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성주가 됐든 김천이 됐건 지금 저러한 괴담 수준의 얘기들에 대해서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저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하고 좀 대화를 해서 설명하자. 들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성주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 대화할 때는 전자파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철우 의원** 그것은 전자파 언급이 아니고, 전자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또 장관님한테 물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까워서 이번에 9월 10일 날 일본의 교토부에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을 가 봤습니다. 동경에서 가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하기 전에 한 8개월에 걸쳐서 주민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 말에, 2014년 말에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전자파 검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웃 동네도 그대로 잘 살고 있고 또 그 앞에,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바닷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있고, 또 바로 옆 1km, 2km 안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원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레이더 걱정 없느냐’ 하니 ‘레이더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인근에 사는 동네 주민 또 이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전자파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일본

에 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믿어 주십시오, 국방정책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산포대에 그대로 하지 왜 피해가 없는데 오느냐’ 여기에서 답변이 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일곱 군데에 동종의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어느 곳은 아주 고지대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광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해수욕장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에는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실측을 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또 광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데 지역에서는 주민들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국방부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께 좀 술선수범해서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면 그 인근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지금 나라에서 정책 중에 전원마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자 전원마을.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서 포함해서 하면 가까운 지역의 은퇴자 마을, 특히 군인 중에 레이더부대, 포병부대 근무한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정부에서 땅을 싸게 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집을 분양을 해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원마을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정부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전문가들이 와서 사는구나’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고, 저는 인근 지역이 만약에 우리 김천 지역으로, 성주 롯데 CC로 발표되면 저는…… 아무리 설득해도, ‘레이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래도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집을 구입해서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데 국방부에서 앞장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 전원마을 되면 장관님도 은퇴하시면 거기 와서 사시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 국민들께서 많이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자파와 관련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초기에 ‘그 기지 안에 가서 몇 시간이고 서서 한번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 제가 성주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젊은 부인에게서 ‘자기 집을 세 달 동안 비워 줄 테니 당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김천 지역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음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이철우 의원** 저는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 인근 마을에 빈 집을 구해서 들어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술선수범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 줘야지 국민이 단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부대 이전계획 같은 것 있을 때 주민들이 안심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김천에 대대급 부대가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에서 핵 보유국은 5개 나라,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

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핵 보유 인정 국가로 돼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 두 번 하고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보유한, 인정된 국가가 되기 전에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그동안 국제사회가 인접국이 핵 무기를 개발하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핵 개발에 나서거나 핵 개발 시설을 공격·파괴하거나 그다음에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중국도 바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자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파했습니다. 지금 UAE와 카타르는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6년도 처음 개발 실험했을 때 또 94년도 NPT 탈퇴할 때 그때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술핵 정도 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 입장을, 국가를 지키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나서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총리님 주재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 부처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점도 유념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총리실 산하에 두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 다른 나라에 없다는 것은 대테러센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총리실에 있는 나라가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철우 의원**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테러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총리실로 왔습니다마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의 통해서 이것이 어디에 있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국민의 오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사이버테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체계를 만들고 법도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 만들기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이런 주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의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성장은 많이 돼서 세계 열몇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그런 우리 동포를 이웃에 두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정사, 부사가 다녀오서 가지고 정사는 ‘전쟁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사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왕실에서는 ‘설마 진짜로 침략하겠느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임진왜란의 참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의 안보위협 속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다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당이 있어서 법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참화와 나라를 잃은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잠을 설칠 지경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해당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리며, 저부터 사드 배치 지역 인근마을에 이사 가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국민의 하나 된 힘이야말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똥똥 뭉쳐 이 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몸 바쳐 희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의원** (거수경례)

제가 거수경례를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6년 제대하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지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거수경례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전방 철책 부대를 가서 24시간

병사들과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고 경계근무를 하고 취침을 같이 하고, 사단장에서부터 이등병까지 다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저는 휴대장비를 포함해서 전투준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을 제외하고 어떤 전쟁을 해도 우리 병사들이 이기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 제가 거수경례를 한 의미는, 이런 병사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사기 올리는 박수를 한번 유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에서부터, 국방부장관도 사드에 하도 혼나 가지고 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핵이 덮쳤습니다. 국방부장관에서부터 이등병까지 우리 큰 박수로 사기를 올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박수)

이건 아마 의장님께서도 뭐라고 안 할 것입니다.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현재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친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도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저는 35년간 안보의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보 상황이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누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믿고 따라 준 국민들께 미안해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역대 정권의 지도층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사당 내 계시는 우리 모두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속죄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에 대해 요즘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 혹시 ‘내시와 선비’, ‘적자생존’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른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확산시키고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그렇습니까? 총리님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선비 중의 선비 스타일인데요. 선비 스타일은 정말 올곧고 정의롭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서서 건의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청와대 들어가시면 좀 달라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SC라는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약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중로 의원** 저것 한번 보시지요. 잠깐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 황교안** ‘전략적 소통’이라는 그런 표현의 약자로 지금 쓰신 걸로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전략적 소통을 모르셨군요. 워낙 바쁘셔서 이런 책을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전쟁을 치른 후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완승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평정작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전을 하고, 아주 고전에 고전을 거듭해서 거기서 왜 고전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 관리를 잘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소가 소통이 안 돼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 사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국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다 드러난 민낯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를 요즘 시중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드(sad)’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새드. 국민들이 슬프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국민들의 여러 반응들이 있다는 점도 같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로 의원** 사드를 결정하시고 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쭙어 봤는데 대략적으로 리스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의 리스크를……

○**김중로 의원** 경제적인 리스크 외에 또 외교적인 리스크는 제외하고라도 대략적으로 추산도 안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것은 경제부처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기관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김중로 의원** 물론 어렵겠지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추산은 해 봐야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드 1개 포대를 설치하는 데 1.5조~2조 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바로 ER이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무기가 나와요. 1년 만에 진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1개 포대를 갖다 놓고 한강 이남 방어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라고 지금 질문하셨습니까?

○**김중로 의원** 사드 1개 포대를 갖다 설치하면 한강 이남 남한지역을 다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전략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응할 때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중로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1개 포대가 그런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3개 포대만 갖다 놓으면 완전히 도배까지 하지 않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드를 비롯한 방어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운용을 하면 방어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사드 1개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북 억제전략이 사드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김중로 의원** 물음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리스크가 수십조 원 될 것이라고요. 그런 국정 운영을 왜 합니까?

저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설치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런데 사드 1개 포대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전혀 효용성

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방부와 보고 듣고 토의한 바로는 사드의 효용성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은 효용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중로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엄청난 문제를 이번에 노출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빨리……

지금 김천이 슈퍼 최적지라고 그러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 갈등까지 들어가요. 대순진리교·천주교·원불교까지 다 부근에 성지들이 있고 김천시민이 성주보다 더 많습니다.

글쎄요, 롯데골프장으로 한다니까 중국에서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빨리 이것을 국회로 보내세요. 국회로 보내서, 핵이 몇 배 더 복잡합니다. 이것 빨리 끝내세요, 더 이상 국력 소모하지 말고.

선거 때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것 국가와 민족 앞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총리님이 되셔야지요.

그런 것 건의를 안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군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이 전략무기를 배치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서, 그 조약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지요. 그리고 여러 무기체계를 배치할 때는 그 한미 방위조약의 체계하에서 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의원** 좋습니다. 빨리 국회로 보내셔서…… 이것 언제까지 갈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위치를 바꿈으로써 한 3~4개월 늦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을 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지요. 줄속으로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조속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특별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중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리께서 잘 판단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핵화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비핵화 선언이? 북한하고 비핵화 선언 언제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비핵화 선언……

○**김중로 의원** 우리나라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중로 의원** 91년에 합의해서 92년도에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오래된 저희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김중로 의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안 가졌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핵을 만들 수 있는……

○**김중로 의원** 아니요, 보도가 문제가 아니고 총리님은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갖고 있지않아요? 보도는 정확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등의 용량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발사를 하기 위한 발사체를 소량화, 작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사체까지 만들어서 얼마 전에 또 시험발사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엄중한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그렇지요? 지금 비핵화를 저희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현재 그 비핵화가 유효합니까, 선언이?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지켜져야 되고 핵 없는 한반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별히 한미 동맹에 의한 방위체계를 확실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없는 선언으로 해서 저희만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김중로 의원** 아니, 핵무장 하자는 게 아니고 상대가 지금 핵을 가졌다고 싫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비핵화라는 게 지금 우리 선언이 맞느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중로 의원** 그것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호방위조약 있지요, 미국하고?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중로 의원** 지난번에 제가 물었지요, 그것 검토할 의향 없으시냐고? 그것 63년 전 53년도에 맺어진 조약이, 미국 가서 저희가 사정해서 맺어진 조약인데 과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약이 아닌지? 역사적으로 모든 조약과 협정은 강대국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 해 보라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이것 이번에 검토를 안 하셨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데, 군에서는 작전반응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핵 문제는 더 그래요. 그러면 자동개입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까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그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처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무 격하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제가 1년 선배지만 얼굴이 늙어 보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국**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로 의원** 우리 의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황교안 총리님하고 장관 중에서는 한민구 장관님밖에 기억에 없어요. 저는 참 건강이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국방 업무를 못 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핵 문제 이것 정말로 참 한심한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군인 선배 입장에서, 아마 한 장관님도 지금 이 핵 문제 때문에 제가 선배·후배 할 것 없이 상당 숫자를 전화해 보고 전화도 받고 전문가들하고도 수없이 연구를 하고 나왔는데 이 핵 문제 때문에 특히 군 선배들, 장군분들께서—아마 한 장관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전부 핵무장을 하자는 거예요. 한 장관님 얼마나 괴롭습니까? 비핵화해서 지금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려니 괴롭지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총리께서도 앞서서 한 두어 차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용 능력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가용 능력을 총합해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개념으로 거기에 억제 및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전략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셔도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중로 의원 그리고 보복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응정보복?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중로 의원 그것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할 수 없는 것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김중로 의원 국민들이 지금 속된 말로 뺨친다고 그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또 국방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의지나 역량과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중로 의원 글썄요, 그 문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분명한 의지와 역량을 가

지고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군 출신으로서 그 문제는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기준하에서 그 징후를 판단할 것이며 그 징후를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누구한테 건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건지, 그것 전작권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미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한 방 선제공격을 받으면 끝이에요. 응정보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핵에 대한 기본은 억제 아니겠습니까?

○김중로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우리의 가용수단을 총합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에 국가적 목표가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제한돼서, 물어볼 게 핵심적인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병제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98년 이후에 대선 때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말 군 출신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모병제 끝나고 나면 또 군복무 단축 얘기할 겁니다. 또 사병들 봉급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장관께서 그런 문제가 대선 때 나오면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그 다짐을 제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떠한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가질 것인가는 그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 세계, 유엔의 192개국 중에서 모병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한 53%, 징병제는 한 47% 정도 됩니다. 적의 위협이 크거나 그런 나라들은 대개 징병제를 택하고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들은 모병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병제를 할 거냐 징병제를 할 거냐를 논의하려면 제1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

항이 북한의 120만 병력 규모에 대해서 한국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모병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 논의를 하실 때는 우선 그 문제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충원을 모병으로 할 거냐 징병으로 할 거냐, 모병으로 한다면 우리의 경제력이나 국민 여러 가지 문화나 의식·풍토에서 가능할 거냐 하는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중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소상하게…… 아까 SC 보셨지요, 전략적 소통?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중로 의원** 국민들하고 소통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모병제를 많이 합니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유럽은 적이 없습니다, 냉전 이후에. 군사력 규모가 전부 20만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간부가 반쯤 되는 곳이니깐 나머지 한 50%의 사병들은 모병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한 50만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그 병사들을 다 모병에 의해서 충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중로 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삼사 일 동안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10명 중 1명이 군 면제 받습니다. 아들까지 포함하면 92명이 받고요. 지금 현역도, 오늘 새벽부터 YTN에 나갔을 겁니다. 고위층 자체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분들이 소위 꽃보직, 꿀보직에 다수가 배치되어 있어요. 아마 장관님 잘 모르실 텐데 이것 제대로 한번 추슬러 보세요. 아마 통계를 모르실 텐데, 이 현역군은 저만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당연히 사회지도층이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각계에 계시는 분들의 자체들이 좀 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구현하

는 차원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 이 문제는 병무청과 국방부하고 제가 입법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습니다.

장관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 노력해 나갈 부분입니다.

○**김중로 의원** 이것 때문에 지금 흡수저 부모님들이 서로 못 살겠다,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한 3~4일 그거 나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감상이나 무슨 상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중로 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절대무기의 개념과 의미를 뺏속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국가 존망, 생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권위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준 권위 있는 그냥 대통령이 아닌 우리 대통령이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국회로 보내서 조속히 처리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핵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참모님들 도움을 받고 청와대 회동 시 건의받으셨던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고 박지원 대표께서 건의드린 당정청 안보협의체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뚝뚝 뚫치면 사드와 핵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통령님의 변화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안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김중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권미혁입니다.

저는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즉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한일 두 나라가 12·28 합의를 맺은 지 9개월째지만 두 나라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가 갈수록 오리무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12·28 합의를 둘러싼 이면합의 논란 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의 표현대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할머니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에게는 당시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원한 책임이 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은 바로 지난해 2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연설에서 가해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한 연설입니다.

총리님, 위의 말처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성노예 범죄행위를 인류의 교훈으로 기억게 하겠다라는 노력을 한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우리 정부가?

○**권미혁 의원** 아니요, 일본 정부가.

○**국무총리 황교안**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미혁 의원** 협상 말고, 일본 정부가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처럼 자신들의 참혹했던 역사를 세계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성과가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다,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

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현안,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는 위안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협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권미혁 의원** 저는 협상 이외에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국 간의 차이가 현재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잘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일본은 이런 노력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만든 바로 소녀상입니다. 소녀상은 세계 유례없이 여성인권을 짓밟았던 일본의 만행을 상징하는 국민의 자존심이고 세계 양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소녀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 아니, 총리님의 생각을 여쭙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느낌을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일본에 설명하고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를 지원해 드리는, 위로해 드리는, 치유해 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의원** 그러니까 그 소녀상이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상징성이 있지요, 단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권미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소녀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서 있지요. 그 소녀상을 정부에서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 소녀상이 엄연히 민간의 영역인데 왜 정부 당국 간 합의 대상으로 거론이 됩니까?

어제 총리님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12·28 합의와 소녀상은 연계돼 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12·28 합의문에서 분명히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장관이 읽은 그 합의문에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의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겠다는데 왜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한국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관계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총리의 사죄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서의 이행 조치—이것이 합의된 사항들입니다.

○권미혁 의원 그러면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는 것이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라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부분은 그 당시 합의된 내용 그것이 전부입니다.

○권미혁 의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한일본대사관의 소녀상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는 정도로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무총리 황교안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지금…… 소녀상의 위치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얘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 내용에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권미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권미혁 의원 이 의미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여기 표현 그대로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권미혁 의원 앞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합의나 논의가 될 때 하나의 준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2·28의 문제는 일본에서 소녀상 철거를 설사 요구했다 하더라도 민간의 일이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권미혁 의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녀상이 12·28 합의에 포함된 것 자체가 한일 정부 당국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민권을 침해한 것이지요. 이것은 민간의 일입니다. 그냥 정부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그 협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12·28 합의는 사실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면합의설이 나오고 일본과 재협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합의의 내용은 핵심이 그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후속조치 이것이 핵심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합의된 내용 그대로만 저희는 집행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 애초에 이 합의문에 소녀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권미혁 의원 정부가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고 나면 소녀상 철거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사실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7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10억 엔 지원을 완료했다는 취지를 밝힌 후에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계속해서 합의한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힘을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억 엔을 주었으니 이제 소녀상 철거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3당 청와대 간담회 회동에서 정치권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황이……

○**국무총리 황교안** 그대로입니다.

○**권미혁 의원** 그런데 많은 정황이 이 같은 말씀을 믿을 수 없게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이미 아까 PPT에서 보셨고요.

그래서 총리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사실입니까? 즉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아베 총리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권미혁 의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만일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왜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정부는 홈페이지나 뭐니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상회담 결과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 그런데 왜 계속 고치지 않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왜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는지 아실 겁니다. 소녀상 철거를 통해서 반인도적이고 그런 범죄를 역사와 세계인의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까 관련 단체와의 협의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12·28 합의에 있는 대로 소녀상 관련 단체와 협의를 시도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일정 부분 거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국민이 정부를 믿게 하려면 이 자리에서 ‘소녀상 철거는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관련된 단체와의 협의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합의의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의 시급성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 했지만 이견 합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권미혁 의원** 만일 이것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자꾸 공전이 되니까 국민들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이면합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면합의 없습니다. 발표된 그대로입니다.

○**권미혁 의원** 혹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소녀상 문제는 마무리 짓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소녀상 문제와 정보보호협정 얘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미혁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7월 5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믿고 싶고 부디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고 임성남 외교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난 2011년 8월 30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일 정부 간의 65년 청구권협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배상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서 내린 위헌 판결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권미혁 의원** 한마디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성노예 피해자들의 배상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해석상의 차이를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래서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라’라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의원** 그래서 이런 현재 결정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가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구상서를 보냈고 2014년부터 총 열두 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의원** 그렇다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는 헌법재판소가 말한 분쟁 해결 절차, 즉 청구권 이행협정 제3조에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현재의 판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의원** 그러니까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현재의 판결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해석상 분쟁도 해결된 것인지? 그다음에 해결이 됐다면,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해결된 것으로 본다면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 합의가 된 겁니까, 일본 정부의 해석대로 합의가 된 겁니까라는 부분을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해석대로 해결과 합의가 됐다면 일본 정부는 분명히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번 12·28 합의를 보면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서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과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법적 책임,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외교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국무총리께서 방금 전

에도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시다마는 12월 28일 합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 총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시하고 또 그러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반성의 이행 차원에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한국에 설립된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출을 했고, 또 그 예산을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혁 의원** 지금 10억 엔이 모두 일본 정부에서 돈이 왔고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피해자 개개인과 합의도 없이 어떻게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즉 마지막이고 다시 되돌려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해결을 피해자 합의 없이 어떻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 배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앞으로 두 달간에 걸쳐서, 아마 10월 말까지는 재단 측에서 할머니들 개개인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원하는 바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12월 28일 합의 내용은 일본 측도 이 합의의 정신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취지를 쌍방향적으로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미혁 의원** 일본 측도 이 합의를 지키겠지요. 일본 측과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이 합의에 대한 내용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합의인데 일본 측이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28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 간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해결이 안 됐다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일본군 성노예 범죄 부분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피해자 동의가 지금 별로 없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피해자 동의…… 예.

○**권미혁 의원** 우리 할머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다르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권미혁 의원** 그리고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불확실한 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부터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절차·내용·합의의 방식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원했다면 이 문제는 이미 95년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지난 12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박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규모가 11위로 올라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 규모가 있는데 피해자들이 원치도 않는 돈을 받느니 차라리 위로금, 상처치유금 이것 우리 정부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으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그들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과 배상에 집중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재협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12·28 합의를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10억 얘기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10억이 무슨 돈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드시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한 협의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죄를 하는 이런 협의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과 그리고 총리의 사죄 등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출연하고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이 얼마를 주고받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본 정부의 책임, 총리의 사죄 이런 것까지를 이행하는 이행 조치로써 집행을 한 것입니다. 돈이야 우리가 낼 수도 있지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그것이 갖는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마흔여덟 분이 살아 계셨었는데 그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여덟 분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권미혁 의원**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마흔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피해자들을 만나서 합의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의 많은 분들은 ‘다 만족할 수야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정도로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원이 다 아주 흔쾌하게 동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흔 분들 중의 상당, 여러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그냥 시간을 끌어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만족한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이런 합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시간만 갔고…… 지금 벌써 15년, 20년이 지나 버렸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할머니들은 자꾸 돌아가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런 조치를 하자 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미혁 의원** 저하고 총리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돈의 성격은 이것이 배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에 합당한 돈의 성격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배상금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선언은 피해자가 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해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역사 지우기를 계속하는 한 일본군 성노예 범죄 해결은 언제나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권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 남구를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를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한에 영변 핵시설 말고 제2·제3의 핵시설이 존재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한미 정보 당국이 다양한 감시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모든 핵시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은 잘 감시하고 있고 또 다른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핵 개발의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 개발의 총책임자는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실무자.

○국방부장관 한민구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북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군 예하에 각각 그 관련 기구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이 주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 군수담당 비서가 실무적인 주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외국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시 제가 정확히……

○윤상현 의원 핵 개발할 때 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 국가의 그러한 관계자들이 조력을 한 것으로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제 남은 발표는 핵무기 실전 배치의 완료와 수소탄 개발 성공, 이 두 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군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금의 어떤 핵 미사일 개발 속도로 볼 때 제1 목표 시점을 2018년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맞춰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북한이 그들의 체제 선전상 특정한 계기를 정해서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그러한, 중간중간 전환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그 시점에도 또 과시적인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김씨 왕조의 체제 유지에 많은 현찰이 필요한데, 돈이 궁해질 경우에 테러 집단이나 분쟁 지역에다가 핵무기 장사할 가능성도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까지 확인된 첩보는 없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가 가장 유념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제가 지난 7월 5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핵 문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겼던 게 오류입니다. 국제 사회는 북핵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그랬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국방부가 결코 북한의 핵 개발 속도나 그런 것을 과소평가

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빨라졌을 가능성에 대비한 그러한 대응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예를 들면 ‘충분한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형화 수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해 왔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그 당시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지난 5일 동시 발사한 탄도미사일 세 발이요, 1000km 비행해서 일본의 경제자유구역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군은 물론 일본 자위대도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전에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가 정보·감시 전력을 사전에 워닝(warning)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징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발사 징후는 알고 있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윤상현 의원** 그런데 동굴이나 밀폐된 지하기둥 같은 은폐된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를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가 장착해서 발사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미사일이 자기 모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 재배치해서 발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미 정보 당국이 그러한 상황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아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우리가 군사위성이 몇 시간마다 돕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그게 금방 사전에 탐지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럴 징후가 있어서 발사가 임박했다 하는 상황은 우리들이 확인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상현 의원** 예.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핵심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방어 임무를 유발하는 적의 공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 미사일 능력을 사전에 제

멸하는 것입니다. 방어와 요격은 이 작전이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군 지하 미사일기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200여 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 위치도 사전에 탐지를 해서 파괴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군사위성으로도 이것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보다는 공격이 최선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유사시에, 즉 전면전 시에 적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그러한 공격적인 개념에 의해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임무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방어 임무가 수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자꾸 사전에 징후를 알고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다 놓고 지하기둥에서 나와서 바로 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미국의 군사위성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KAMD라든지 킬체인이다 이런 계획도 통제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 주도의 개념계획만 믿고서 일단 추진해 보자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다시 세세히 따져 보고 대안 전략을 구축해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미국 측의 능력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전 초에 적의 미사일을 가장 빠르게 파괴 내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킬체인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치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는 KAMD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 그와 같은 소위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대량응징보복계획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의 SLBM 등 탄도미사일 기술 진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이동식 발사 차량과 함께 운용을 하면 적의 기습공격 능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됩니다. 한마디로 적군의 엄폐성은 보장되는 반면 우리 군의 조기경보 기능이나 킬체인 선제타격 개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속도가 국방부의 생각

보다 훨씬 빠르지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것을 다 방어해 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늦다는 크게 저희들이 그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군사적인 대책만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위 제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군사적인 이해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핵무장 주장에는 반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보다도 저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핵무장 주장은 경제·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주장도 미국이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방안이 있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에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명확한 행동계획을 미국과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앞서도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담론이 제기되는 상황의 엄중성을 제가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도 유념할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것인데, 미국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미국과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니다.

○**윤상현 의원** 군이 대량응정보복—KMPR이요—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할 경우에 시행한다고 설명하는데, 핵무기가 사용되기 전이 아니라 후에 하는 작전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의 대량응정보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핵무기 사용이 명백히 임박했다고 했을 경우의 선제타격의 개념과 또 그 이후에 응징의 개념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러한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 이 작전의 진짜 어려운 문제는 군 통수권자가 작전 명령을 승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대량응정보복을 어느 군 통수권자가 쉽게 명령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면전을 상정한, 전면전이 임박한 초기 단계 이런 때에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한,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또 그러한 절차 이런 것들은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래서 저는 군 통수권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수 없도록, 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오관 또 의사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군이 최종의 군사 판단과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와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KMPR이든 킬체인이든 선제공격이라는 게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특히 적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작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방어진략이 아닌 공격전략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직 전시상태에 있고요, 만일 전쟁이 재개가 된다면 우리 군의 방어 후 반격전략 그것을 실행해 볼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논의되고 있는 선제타격이라고 한 개념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정교히 다듬어 나갈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실전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기 위해서 무력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반응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의 정권이양기 혹은 다음 정부 초기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공할 위력으로 응징하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에게 인질이 되고 또 특히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작전계획부터 이 체질까지 전부를 방어준비태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시응징

태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한 그 인식에 기초해서 대량응징보복 개념, 계획이 발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북한 핵무장이 종착점으로 향해 가는 데 핵 공격이 예고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 방호시설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2만 3000여 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이 있습니다. 1등급 대피시설이 40여 개소, 4만 1000㎡ 규모에 불과합니다. 3만 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1등급 대피시설도 추가 기능 보강을 거쳐야만 핵 대피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방사능 피폭 위험이 닦혔을 때 어디로 대피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대피시설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미비한 곳도 있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보수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 국민안전처에서 보니까요, 200평 규모의 핵 방호시설 만들어 500명 정도를 수용하는데 16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기존 대피시설에다가 방폭 기밀시설, 공기정화시설을 보강하는 일종의 간이 핵 대피소 방안도 검토했는데 여기에 8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한반도는 좁고, 중심이 좁습니다. 북한 핵은 가까이 있습니다. 스킨드미사일이 발사 후 서울에 떨어지는 데 2분 30초가 걸리고요, 북한의 북부기지에 있는 노동미사일이 서울에 떨어

어지는 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대피할 시간이 기껏해야 5분 안팎, 길면 10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핵 대피명령을 내릴 때 해당 지역에서 대피 및 재난관리 임무를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국민을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것도 안전처에서 민방위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주민 대피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지자체는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처도 좀 더 보완하지만 지자체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민 대피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또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상현 의원** 스위스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가 국민 전부를 수용하는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훈련도 자주 합니다.

국민의 철저한 안보의식은 국가가 요구한다고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역할부터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계 압박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동원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함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북한이 이 부분을 고도화해 가고 있고 다양화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또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토대로 해서 비상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해 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북 라디오 방송에다가 AM·FM 주파수를 배정해 달

라'는 요청 거절했습니다. '38도선 이북에다가 바깥 정보를 들여보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달라. 빨리 실행하자'는 제안도 외면했습니다.

이런 수단들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수단에 들어가지 않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단계와 수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차제에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님께서 제가 제시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 카드만 보았지 민간 차원의 카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변화시키는 진짜 강력한 힘은 민간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지배층을 상대하지만 민간 네트워크는 지배당하는 북한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결국 특권 지배계층이 아닌 꺾박받는 북한 주민들 손에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통위는 라디오 방송을, 기재부는 재정 지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대북 대체는 민과 관이 함께해야 되는 국민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긍정적인 검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핵 해법, 외교적·군사적 해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북한 민주혁명의 길이 있구나'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핵은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최후의 생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북한은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계획된 개방경제 또 계획경제를 통해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핵 폐기를 통해서 정치 발전과 주민경제 발전의 보증수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북한이 북한 땅에서 북한 민주혁명을 통해서 건설되고 쟁취되게끔 도와야 합니다. 새로운 북한 민주혁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간혹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미국식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미국식 레짐 체인지는 북한의 경우에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 방법론 측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의 민주혁명은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이 이미 상당히 변화돼 있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양한 대북 압박의 수단들이 다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래서 북한 혁명의 주체는 바로 북한 주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즉각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그 나라들의 국민들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면 북한 주민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꾸기 위한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집니다.

물론 우리의 제일 목표는 지금의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북한 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 정부하고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총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전략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핵의 대응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응수단 없습니다.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핵이 사용되는 순간 그곳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뉩니다. 단 그 이전의 역사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대응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포는 상대적이고 이성적인 두려움입니다.

70년 공포통치를 물려받은 김씨 왕조의 젊은 후손에게 우리가 그런 이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70년간 전쟁을 준비해 오고 60년간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 정권이 그런 대등한 공포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남과 북은 공포에 연계된 담보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천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잃을 것은 그 사람 목숨 하나뿐입니다.

둘째, 균형이라는 것도 미국과 소련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서로 최후의 대안이 있고 또 보복할 시간과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가능한 개념입니다.

한반도는 좁은 땅입니다. 그리고 핵이 아니라도 이 좁은 땅을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군사력이 이미 침예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전쟁의 문이 열리는 순간 피할 곳도 남아날 곳도 없습니다. 잣데미만 남는 것에 무슨 균형이 소용 있습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그저 수사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지형과 군사 현실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방심해 왔고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북한 국민의 힘으로 북한의 민주혁명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 원미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입

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임무 역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절망적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등골이 휘는 교육비 부담으로 생계가 불안하고, 전월세 대란으로 주거가 불안하며,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이 말해 주듯이 노후가 불안합니다.

생활임금제 도입과 전월세 대책, 통신비·사교육비 절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제민주화 그리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복지 확충을 통해서 내수 구매력을 확보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고 그저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챙길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제는 지진의 공포까지 현 정권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그저 남 탓하기에 바쁜 정권입니다.

지진 뒷북 대응 지적에 대해서도 사상 유례없는 강진 탓이라고 변명하고 경제 위기는 대외여건과 노동자 탓이고 가계부채는 빚내서 집을 산 국민 탓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주 탓, 메르스 사태는 낙타 탓, 미세먼지는 고등어 탓, 권력 실세의 비리는 언론 탓 그리고 북 핵실험은 햇볕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 판단하면 이를 바로잡아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야 할 집권 여당은 청와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정권의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지 청와대 경호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정부는 엄중한 안보 위기하에서도 남북관계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화 없는 강경 대응 8년 동안 북이 굴복은커녕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거듭해서 한반도는 핵전쟁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심각한 오판을 넘어서 이제는 여권 일부 인사들까지 안보와 평화의 원칙이 비핵화인지 핵무장인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안보와 평화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은 국정의 대전환이라는 생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의 5차 핵실험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SLBM 실험도 거의 완성 단계라는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부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번 5차 핵실험 결과는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4차 핵실험에 이어서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핵탄두의 소형화를 통해서 시험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보유 수량이 몇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핵무기의 수량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고 플루토늄의 양이 현재 약 40여kg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번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는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핵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다른 수단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어떠한 수단에 탑재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능력을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가는 두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소형화·경량화의 수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00여 개에 이르는 미사일, 수천 문의 장사정포, 항공기, 핵배낭, 심지어 드론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드가 이런 모든 운반수단을 방어할 수는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김경협 의원** 북이 핵을 장착한 장사정포나 단

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수도권 지역은 사드가 요격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만약에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에 지상 폭발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드는 전혀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의 대응책을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장거리 포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것을 소형화해서 포탄에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까지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렇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경협 의원** 아니, 핵탄두가 사드 요격에 의해서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에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지 않느냐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중에서 고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공중 한 500m 정도 상공이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또 사드는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했을 경우에 그 요격 범위나 요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하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의 군사적 효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 중에서는 사드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아니, 제 질문은 동시다발로 공격을 했을 때 사드의 요격률과 요격 범위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줄어들드느냐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로 오면 그 요격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협 의원** 이것 시뮬레이션한 적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김경협 의원** 2013년도의 록히드마틴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동시다발 미사일 발사의 경우

에 요격 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드는 핵을 장착해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미사일이 아닌 운반수단에 대해서도 방어가 불가능하고, 동시다발로 공격해 오는 핵 미사일의 경우 요격 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마치 이것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다 막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사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에서 최상의 무기체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시다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드 1개 포대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공망은 사드와 페트리엇와 여러 가지 다층적인 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군사적으로 대응능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협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국내 사드 기지를 표적으로 해서 미사일 전진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을 전진배치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김경협 의원 아니, 장관님은 필요 없다고 보실 텐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중국과 러시아는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니까 미사일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경협 의원 국내 사드 기지를 표적으로 해서 미사일을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있는 사드를 공격한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로 또 격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드를 공격하면 사드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김경협 의원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중국 미사일도 다 요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요격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경협 의원 사드 배치는 전면전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 무용지물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대열 이탈 우려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위기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보복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당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지킴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정부의 사드의 성능이나 효용성,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 소요 비용, 그다음에 방금 제가 질문드린 만약에 중·러의 표적 미사일, 그다음에 경제보복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충분히 대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도 드리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군사적 효용성이나 북핵 미사일에 대비한

우리의 다층적인 방공망의 구축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차관 나와 계신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북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사드는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김경협 의원** 공격했을 때 요격하는 수단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의원** 비핵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런데 우리의 방어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북한 정권도 핵무기의 군사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제재에 참여해야만 경제 제재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의원** 그런데 중국은 유엔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중의 무역 규모를 보았을 때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4, 5월 달에 잠시 이렇게 해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 원유의 90%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고 북의 돈벌이 수단 중의 하나인 중국으로의 노동력 송출도 제재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기본적으로 중·북간의 교역이 지난 3월 안보리 제재의 결의 채택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체가 그런 양상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정체가 아니라 증가되고 있다고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의원** 어제 여당 의원님도 경제 제재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실효적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후에 북이 5차 핵실험에 나선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중·러의 제재를 소극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북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 자체로서 다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 시에도 시진핑 주석이 저희 박 대통령께도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 온 바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한중 간에 어떠한 인식의 차이도 없고 사드 문제는 그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사드 배치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를 들어서 2000년 마늘과동과 같은 상황에서 보는 그러한 중국 측의 구체적인, 또 어떤 가지적인 우리에게 어떤 제재나 압력 조치는 아직 취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사드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정부로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관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또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물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 제재 조치는 발표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이 이미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한중 지자체 간에 교류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류 연예인들이 출연 금지를 당하거나 공연이 취소되고 한류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사드와 무관한 것으로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그런 여러 가지 동향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

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우려스러운 움직임도 흔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선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또 중국 측에 대해서는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절대로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설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렇다면 이런 여기에 죽 보도된 내용들은 전부 다 오보라는 얘기인데 ‘국내 화장품 위생검사 수입 통관절차 강화’ 8월 8일 서울경제, ‘삼성SDI·LG화학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명단 제외 방안’ 8월 14일 연합뉴스, ‘생명보험사 ING생명 인수합병 돌연 연기’ 8월 14일 연합뉴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다 오보인가요, 아니면 사드와 무관하다는 뜻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측이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주중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기업 또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우리의 사드 필요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예.

2007년 발효한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러시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시설부지, 운송차량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통치권 제약이 따르는 사항, 즉 우리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정부가 판단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받았습니다. 2007년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의원 사드 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사드라는 무기체계 배치는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용산 미군기지 이전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경우에는 우선 협정 자체가 조약의 형식을 띠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제처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주한미군지위협정에도, 29조 2항이 있습니다. 입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입법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 조항은 SOFA 자체의 발효에 관련되는 조항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이번에 사드 배치도 미군부지 내에 무기가 새로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직 부지 문제가, 물론 국방부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외교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결정이 안 되었지만 이미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뭐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무기체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사드 배치 결정을 이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경제적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증과 주변국과의 협조를 위해서라도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그 과정에서 효율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이나 협조, 그리고 배치를 철회해야 될 경우라면 미국에 대한 설득과 협조의 시간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론분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연착륙 해법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9월 9일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어저께는 로켓발사 실험을 또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 이렇게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기 합의된 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북한의 핵실험은 핵실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사드가 아니잖아요. 아까 사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서…… 여당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 차원에서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여권 전·현직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핵무장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만약에 핵무장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세계가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특별히 핵 없는 사회는 그 비전이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핵 비무장, 핵으로 무장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비핵화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처럼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버틸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실현 불가능한 안입니다.

물론 어떤 무기라도 하나 더 있으면 국방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단세포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는 그 무기로 인해서 경제적·외교적 손실 등 종합적인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와 같이 사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비핵화 원칙에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에 편승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의 핵무장에 핵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그런 핵의 공격 측면의 문제와 사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방어용 체계, 자위적 방어체계입니다. 이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고도화하고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가……

○**김경협 의원** 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핵무장이라는 것은 결국 공격한다는 것인데 사드는 방어체계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김경협 의원** 알겠습니다.

북핵의 선제타격론을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는 정부는 국제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핵실험할 때 보니까 정부가 핵실험하는 징후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도 파악을 못 하고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그 징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냐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근에 어떤, 최근에 상황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신 거고 핵실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 중이다, 곧 언제쯤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발표된 게 없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언제든지 북한에는 김정은이 결단하면 핵실험도 할 수 있고 핵무기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김경협 의원** 그것은 상시적인 징후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경우에.

○**국무총리 황교안**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렇게 봤을 경우에 그것은 핵공격의 상시적인 징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만약에 자칫 이런 선제타격론이, 선제타격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전쟁, 곧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핵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거기의 대응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안보 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지만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핵 고도화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관리를 강조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 차례의 핵실험 등 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6자회담을 통해서, 2·13 합의

와 10·3 합의를 통해서 비핵화와 에너지 원조에 합의했고, 북은 영변 원자로 폐쇄, 냉각탑 폭파 등 일부 핵시설 폐쇄가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노력들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완전히 비핵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 핵실험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려 있고 심각한 위기상황 관리를 통해서 관리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상황은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 북한의 핵 도발이나 핵 고도화를 위한 노력들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협력은 장기 침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이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8년간 대화가 중단됐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양국, 북한과 한국 간에 고위급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대화의 노력들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답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핵 고도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화·교류할 단계가 아니라 제재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대화가 진전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가 대화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협 의원** 경제협력, 인도적인 교류하고 정치·군사적인 면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의 위험을 줄이고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북한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대 지원

을 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경협 의원** 지금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해 왔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제재해야 되는, 제재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북 관리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원칙은 저는, 첫 번째 정경 분리 대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화 없는 제재 9년 동안에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다섯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열한 차례, 잠수함 발사 SLBM 사출 실험 1회, 발사 시험 세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압박 강경책을 구사하는 기간 동안 북한은 마음 놓고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러한 것들의 기술은 급속도로 진전돼서 핵 개발은 고도화되고 완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계에 이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6월 17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의 공동성명이나 그다음에 9월 18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대화 필요성 강조, 뉴욕타임스의 대화 필요성 강조 등 계속 대화 필요성들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제사회의 기본 기조는 지금은 북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에 지금은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김성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다시 물러나느냐 아니면 확실한 대응으로 이를 이겨 내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한낱 구호에 그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란 우리의 손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 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켜야 할 때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주 지진 문제, 한진 물류 사태, 조선업계 불황, 북한 핵 위협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대통령님, 총리님 또 각료들,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 정부도 중심을 잡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언제쯤으로 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다음달 10월 10일쯤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또는 수일 내에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차 핵실험을 하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한미 동맹의 능력을 총합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후에 다섯 번의 정부가 바뀌고 23년 동안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또 실행계획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핵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대북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한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을 포함해서 대북 퍼주기, 북미 양자회담, 6자회담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결국 되지 않았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새로운, 단호한, 확실한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정부 측에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총리께서 핵무장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백번 이상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부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모습들로는 북한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총리께서 제가 질문하면 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겠다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것으로 보는데……

총리, ‘맞불’이라는 내용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커다란 산불이 났을 때 기존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압이 되지 않을 때 또 다른

큰불을 났 가지고 그 불을 소진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핵무기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해야 됩니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1992년에 우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이미 포기하고 폐기하고 NPT 탈퇴하고 전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주장하는 부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다.

‘미생지신(尾生之信)’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난 뒤에 그때 후회할 겁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핵무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핵 없는 비전을 통해서, 핵 없는 비전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정책의 큰 틀에서 사실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부분 충분히 효과 있고 일리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제로 베이스에, 원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됩니다.

핵시설 선제타격론,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올려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가지고 필요하면 그 카드를 하나하나씩 사용하여 중국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북한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국회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찬 의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우리가 사드 배치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정 때문에 그렇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이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핵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렇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에, 2006년에 1차 핵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김성찬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안보가 참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장관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또 풍부한 군사적 경험과 식견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서 지금 소신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장관님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충족하는 능력과 소신을 장관님께서 보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통상 대정부질문 할 때 보면 좀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하

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지금 몇 %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퍼센트를 활용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다섯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또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단거리·중거리·장거리까지 개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북핵 미사일의 고도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한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는 킬체인이라든지 KAMD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성찬 의원** 지금 킬체인과 KAMD가 몇 년도 정도 돼야 완성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우리의 대응 시기가 북한의 핵 개발 시기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북한의 핵 개발은 1년 이내에 작전 배치될 것이라든가 지적이 많은데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의 방어 개념과 능력은 2020년대 중반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께 안심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 계획을 2020년대 초반까지 저희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자산을 총 집중하여 최우선으로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킬체인과 KAMD가 완성이 되면 북한 핵과 탄도탄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킬체인과 KAMD는 유사시 초기대응능력 구비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찬 의원** 완벽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 수단이다’라는 부분이 국민에게 설득되어야 국민들께서 ‘아, 국방부를 믿을 수 있다’ ‘정부를 믿을 수 있다’가 되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완벽하지 않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셔서

국민들께 안심을 못 드립니다.

지난 6월 무수단 발사 시, 8월 SLBM 발사 시 고도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고도 한 500k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김성찬 의원** 그림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월 무수단 고각발사 때는 1400km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성찬 의원** 다음 그림, 8월 달 SLBM 때는 500km 올라갔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고각발사 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성찬 의원** 작년만 하더라도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고각발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대정부질문 때, 상임위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러한 우리의 상상을……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김성찬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고각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험을 위해서 고각발사를 한 것이고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각발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찬 의원** 이게 전술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과 우리 관계에서는 전술적으로 무기를 운용하고 대비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방어하지 않습니까? 즉 저렇게 했다는 부분은 전술적으로 북한의 탄도탄을 고각발사해서 우리의 사드나 KAMD로는 막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발사한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해도 150k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첩방어를 한다고 하면서 저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저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전술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대부분이 스커드와 노동이 주류를 이루고 무수단이 수십 발, 그다음

에 장거리 미사일, 또 SLBM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굳이 이런 무수단이나 SLBM을 고각사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창과 방패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창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각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드나 PAC이라든지 이러한 방어막을 뚫는다, 뚫겠다 하는 부분은 군사적 식견이 조금만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을 고각발사하더라도 대기권을 지나서 한 40~50km 고도 밑으로 내려오면 그 미사일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이런 것으로 요격 기회가 좀 더 충분히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지난 6월 달 8월 달, 전부 다 고각발사할 때 마하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PAC 체계는 마하 10 이내에서 주로 효율적인 무기체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것이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40~50km에 들면 그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커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요격체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김성찬 의원** 지금 사드 1개 포대로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효율적이다,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1개 포대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 범위가 한반도 남부의, 즉 대한민국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그림 한번 내 보세요.

지금 사드 1개 포대가 개략 저런 모습이란 말이지요. 최근의 SLBM을 포함한다면 저것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음, 최소한 사드는 3개 포대 정도를 배치하여야 SLBM, 즉 동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또 고각발사한 이러한 탄도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현존 무기체계로서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라는 부분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1개 포대보다는 추가적인 능력이 확보되면 더 중첩되고 보다 방어 범위가 확장되고 하는 그런 군사적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찬 의원** 이번에 공개한 KMPR 개념이 어떤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KMPR은 적이 핵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해지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의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한 응징 차원의 우리의 정밀 미사일 능력을 위주로 해서 보복할 수 있는 개념 또 계획입니다.

○**김성찬 의원**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이번에 정부가 잘한 조치 중의 하나가 저 KMPR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평양을 초토화하여 더 이상 핵 개발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가지겠다는 북한의 망상을 없애도록, 북한이 핵 개발할 때는 체제가 무너진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러한 계획은 정말로 정부가 잘한 조치다. 그렇지만 이것이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화되는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체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수단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 국방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 필요하다면 조건부라도 한일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이 협정을 유지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엄중한 안보 현실은 우리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하나로 단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는 일이다, 북한은 핵 개발할 능력이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두둔하거나 방관했지만 이제 북한 핵무기는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반대만 했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면 중국의 공격 때문에 제주도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의 공격을 받도록 했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고 정보 공개가 미흡하였다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탄을 막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개인의 소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쳐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 안보 위기에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분열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 줘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정부에도 당부합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SLBM은 1년 내에 작전 배치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 태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새로운 확

실한 대비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상의 전략은 최강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겨 낼 능력이 있어야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없는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온한 평온이며 구걸하는 평온일 뿐입니다. 우리의 안위를 김정은의 손에 쥐어 주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으로 뒷받침되는 평화야말로 당당한 평화이며 지속가능한 평화임을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김성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남양주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리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보여 준 모습은 미안하지만 무능과 무대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북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깜깜했습니다. 8개월 전에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더 강한 국제 제재만 외쳤을 뿐 정작 북의 5차 핵실험은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을 조금이라도 저지시켰습니까? 왜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하면서 지금 이 박근혜정부 아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 강화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안보는 더 위태로워진 것입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금 더 강한 제재, 선제타격 등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말 폭탄으로 마치 분풀이하듯이 대응해서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지난 9월 9일 북의 5차 핵실험 당일 날 어디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세종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에 공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에 가 있었습니다.

○김한정 의원 혹시 세종에 가시기 전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이전 전주부터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한정 의원 마음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대비는 해 왔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한정 의원 그런데 대통령이 외유 중이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있어야 될 장소와 있어야 될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선이라든지 여러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김한정 의원 대통령 외유 중일 때 안보 위기 상황 발생, 비상상황 발생 시에 책임이 국내에서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게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 총리에게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한정 의원 그래서 총리께서는 핵 발사 보고를 받으시고 상경을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시했습니다. 부처에 얘기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NSC 회의를 준비시키고 세종에서 출발해서 서울 왔습니다.

○김한정 의원 북의 5차 핵실험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한정 의원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핵실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6개월, 뭐 8개월.

그 상황에서 NSC는 사태 발생 이후 1시간 반 이후에 열렸습니다. 이게 혹시 정상적인 소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국무총리 황교안 NSC를 열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취했고 그리고 부처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같이 모였고 그래서 NSC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김한정 의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북한 핵실험 징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미국 측

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우리 정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방부장관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우려에 대해서 여러 검토들이 있었고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유도 있었습니다.

다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발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하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대비들은 충분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김한정 의원** 북한 4차 핵실험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4차 핵실험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5차 핵실험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예견된 핵실험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북의 4차 이후의 핵실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라도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제공받아야 될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비축한 많은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재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정 의원** 제재의 방향은 맞았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아직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여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 북한의 이런 거듭된 그리고 무모하고 공멸적인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마땅히 응징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결의안 2270호를 우리 정부가 노력했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한정 의원** 그 안보리 결의가 나왔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 어떻게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써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역사적 결의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7개월,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북한이 축적해 온 그런 핵 개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역대 가장 강력한 국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의견이 나뉘지 않고 합치해서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의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특히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이른바 북한 무시 전략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이제 한계에 온 것 아니냐, 이 상태로써는 고삐 풀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고 안정을 그리고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는 정책적 수단으로써 유효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동맹은 제가 좀 과문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거듭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독자 제재도 하고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제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서도 격앙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반영으로써 아마 많은 강경 발언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다 하자, 참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 같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안보의 목표가 전쟁이나, 전쟁 방지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총리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성 김 국무부 대북대표가 우리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고 회동을 했지요? 거기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핵무장론에 대해서 성 김 미국 대표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입니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김홍균 본부장도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 유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군을 거쳐 가신 분들이 또 집권 여당의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핵무장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하시는데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원님들 또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이 북한의 동향이 위협하고 또 국제사회

에 대한 도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 의견이 통일되고 일치해서, 단합해서 함께 대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의원** 저는 이런 핵무장론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론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도리어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미국의 핵 억제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지켜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북한이 핵을 쏜다면 그것은 한미에 대한 공동의 공격이고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핵으로써 핵 자산을 가지고 대항해 나가겠다,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의, 우리 여권의 일부 지도자들이 자체 핵무장을 이야기한다면 한미 동맹을 파괴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북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갖겠다고 국제사회에서 용납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권의 궁극적인 우리의 노력들은 전쟁 방지 아닙니까? 핵을 못 사용하게 해야 되고 핵 미사일 발사를 아예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핵 사용을 전제로 하고 핵 미사일의 발사를 가정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법은 군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국방부는 적어도 지난 1953년 종전 이래 수없는 북한의 도발과 시도에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 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우리의 방어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이 갖고 있는 위협은 중차대하고 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지만 우리의 대응은 정말 침착하고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핵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적 노력들을 국제사회에 보여 줘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무책임하고 실효성도 의심되는 그런 핵무장론이라든지 무슨 타격론이라든지, 마치 전쟁하는 것이 지금 북의 위협에서 우리의 최선의 방향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냉철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사 강조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분들이 핵무장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식 속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같이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위한 이런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까지를 드립니다.

○**김한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 단체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고가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선제 타격론을 미국의 전직 군사지도자가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읽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보고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북과의 핵 동결 협상부터 당장 착수해야 되고, 핵 동결의 대가로 식량지원, 한미 군사훈련의 수 정도 검토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대안들이 실패한 이후에 그래도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는 자위적 차원에서 선제타격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빅터 차(Victor Cha)—부시 대통령의 외교보좌관, 강경파였습니다—등등 많은 공화당계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제의를 한 것이 바로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북핵 문제를 아예 무시해 버리고 협상도 대화도 안 하겠다는 태도가 도리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압박과 대화 협상을 병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도 이번에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은 무척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들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의 의지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점점 더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 속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입니다.

오전에 권미혁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애써 지금 회피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운영위에서 질의를 했고 또 오늘도 총리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지만 소녀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합의해 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협상의 상대방인 아베 총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 썼으니까 소녀상 문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28 합의의 내용을 보면 양쪽에서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본 측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 줄 수 없다 했을 때는 12·28 합의는 종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28 합의의 내용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했습니다. 또 일본 총리의 사죄, 했습니다. 그 이행조치 부

분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이행조치 등을 통해서 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이 다 이행한 이런 부분 외에도 여러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합의정신에 입각하고 또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그런데 그게 총리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든 일본의 각료들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12·28 합의 무효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서독 정부가 그리고 독일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심지어 독일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 유대인 학살 기념관 이제 좀 그만 문 닫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소녀상을 왜 문제 삼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그리고 합의정신에 기초해서라도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단호한 대처, 10억 엔을 돌려주겠다는, 돌려줄 수 있다라는 자세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심재철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증평·진천·음성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 7월 29일 태프트 미국 육군장관과 가쓰라 일제 내각총리대신이 비밀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명 가쓰라-태프트 밀약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용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채 36년간 일제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으로부터 두 번의 핵 공격을 받은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통일을 못 하고 미국과 소련의 세력 다툼으로 분단의 역사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생존의 기회를 얻었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무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이와 같은 미국의 도움에 우리 국가의 생존을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던가? 자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오늘 석간에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 참전을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은 결과로.....

○경대수 의원 47 대 49로 반대가 많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경대수 의원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공격을 받고 보복 핵 능력이 있을 때 과연 미국이

자국의 핵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핵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와 같은 군사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은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께서?

○**경대수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이 선제든 우리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공격이든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공격을 받고도 북한이 반격 능력이 있을 때, 과연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군사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인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여기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가했다고 한다면 그 피해가 엄청난 것이고 또 북한이 제2의 타격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확장 억제력을 약속한 부분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미국 여론의 흐름이 지금과 같고 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가 지난 번에 발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미 동맹이 끝까지 지금처럼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말씀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관측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의회지도자들 또는 여러 가지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캠페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와 실제 대통령이 되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괴리가 있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동맹을 위해서 견지해 온 정책노선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약속 이런 것들은 지켜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대수 의원** 얼마 전에 북한이 고속도로의 터널이 있는 부근에서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미

사일 3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는데 만약에 그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노렸다면 그 도발 징후를 우리가 미리 알고 선제타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에 의한 공격상황을 여러 가지로 상정하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우리에게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경고 없이 무턱대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전면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도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징후들을 파악하는 절차, 지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에 따른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그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들이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대수 의원** 중국이 지금 대북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오늘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국경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금 빈번하게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국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결의안 2270호에 동의하고 또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인 만큼 저는 참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경지역에서의 그런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군사전문가 내지는 평생 군에 몸담고 계셨던 장관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분단이 영구화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북한이 핵으로 계속 생존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파탄 상태에 이르러서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허수아비 정권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뜻대로 북의 핵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온다면 그 핵으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할 수 있고 북한의 동해안은 중국의 내해가 되고 군사기지화가 돼서 미일 동맹, 한미 동맹도 끊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전문가들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견해를 포함해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의 장래에 관한 중국의 입장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지금 일부 견해에 따르면 북한이 점점 더 핵실험도 계속하고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 간 것은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 심화된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뭐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가 최초로 국제사회에서 식별된 것이 1989년도이고 그 이후로 여러 정부가 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던 간에 북한의 핵을 불용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정책의 결과로써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어떤 정책이라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본적으로 노동당 규약과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을 명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지금 5차 핵실험까지 이루어졌지만 1차 핵실험이 2006년도에 이루어졌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2006년 10월입니다.

○경대수 의원 그리고 북한의 NPT 탈퇴는 200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핵실험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장기간에 걸친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생

각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989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식별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그렇다면 북한의 5차에 걸친 핵 실험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햇볕정책이든 강풍정책이든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역에는 아직도 사용 안 한 쟁도가 2~3개 더 있다. 거기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쪽에 준비되어 있는 쟁도 또 굴설하고 있는 쟁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핵실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그렇다면 핵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핵실험을 할 리는 없고 점점 고도화된 핵실험으로 나아갈 텐데 지금 우리 정부의 핵에 대한 대북 정책은 항상 사후 대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선제적인 대책은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선제적인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부도 군사적인 대책 외에 외교, 정보 또 경제적인 대책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는 핵실험이 추가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의원 장관님 잠시 들어가시지요.

통일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가 발간한 남북협력기금백서에 보면 ‘햇볕정책이 시행된 10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의 핵 개발 포기 대가로 제공했던 경수로사업 등에 총 8조 원 정도가 지원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여진 걸로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런 돈이 북한에 여러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또 군사적인 용도로도 쓰였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경대수 의원 8조 원이 전용이 안 되고 지원목적 그대로 다 지원이 돼 가지고 굶주린 북한 주

민들한테 지원이 됐다면 아사하는 주민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견해도 일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당시 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했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대수 의원** 지금 남북 간에 사실상 대화가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통일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북긴장 완화를 위해서?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핵 개발과 도발 위협을 막고 그래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화와 통일 기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높이고 새로 신설된 인권법 관련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인권법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법이 11년간 노력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한다든지 보호하는 노력 자체가 지금 남북통일을 위해서 통일정책으로도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권법과 관련된 통일부가 실제 행동에 나선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4일 인권법이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인권법이 통과되었을 때 지금 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드는 일들 또 관련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준비를 지속해 왔습니다. 또 관련해서 통일부의 직제도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고요. 지금 아마 이번 주 내로 공식적으로 직제 개편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등도 곧 이사 선임이 마무리되면 업무를 시작할 것이고요. 또 민간에서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여러 NGO들과 협력을 하면서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경대수 의원**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사드 배치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전략무기를 이렇게 들여와서 배치하는데 국제사회에, 온 동네에 이렇게 공개하고 들여올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비밀리에 들여왔다가, 이미 들여다 봤다가 지금 5차 핵실험이든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뒤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미 방어용 무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라면 우리 정부가 좀 더 신뢰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2014년도 6월부터 공론화가 이미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비밀리에 전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또 공사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공론화가 되어도 끝까지 그렇게 노력했어야 됐던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이게 무슨 규모가 아주 작은 부대, 아주 작아서 기존의 기지에 갖다 놓는 무기체계라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또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그것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경대수 의원** 정부 측 견해에 따라도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는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앞에 김성찬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사드 배치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방위가 다 됩니까, 고고도 영공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1개 포대가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체계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돼 있고 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사드 포대가 전개됨으로써 북핵 미사일에 대한 중첩된 다층 방어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방어력이 훨씬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그러니까 고고도 지역으로 따져 보면 어쨌든 지역방어 개념에서 지금 사드 배치

지역에 배치가 돼도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어할 수 있는 영공조차도 100% 방어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한 2~3개 포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단순히 수적으로 보면 1개 포대보다는 2~3개 포대가 배치될 수 있으면 방어력이 더 증첩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1992년에 NPT에 가입하고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중국, 러시아, 미국 다 핵을 갖고 있고,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핵 재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과 50km도 안 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의 수중에 핵이라는 무기가 지금 손에 쥐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 혼자서 비핵화 끝까지 선언한다고 그게 우리 생존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효과적인 걸 떠나서 저는 지금 북핵 미사일이 주는 그러한 위협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또 시민사회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저는 또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정책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제를 통해서 북한 핵 미사일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그러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금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16번에 걸친 미사일 도발과 또 5차 핵실험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주장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장관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나 우리는 전쟁보다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스

모젠소라는 정치학자가 얘기한 말이 언론에 인용되는데 다투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장을 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핵무장을 못 한 나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들다가 죽어버리는 것, 둘째는 미리 항복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기대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2차 보복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과연 미국이 자국의 영토에 핵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보호해 줄까,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한 북한 핵의 억제 및 대응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군의 소위 재래식 전력을 통한 억제 능력의 보장,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또 정보 또 외교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총합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장관님, 방금 전에 재래식 무기 말씀하셨는데 서울 상공에 핵이 터져서 20만 명이 살상된단든지 이와 같은 보도도 있습니다만 20만 명이 아니라 단 2000명이 살상이 돼도 핵으로 살상이 됐다 이와 같은 게 현실화가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이미 버려진 카드가 되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존 능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 그런데 재래식 무기 가지고 될까요?

KAMD, 킬체인 이것 말씀하시는데 이것 동시다발적으로 핵 공격 받으면 우리가 막아 낼 수 있습니까, 솔직히?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 또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무기체계의 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군사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핵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대수 의원**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공을 다녀갔고 또 오늘도 온다고 그러든가 그러는데 무장도 안 하고 또 날씨 흐리다고 안 오고…… 이 정도의 무력시위 가지고 김정은이가 겁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대수 의원** 상공에 날아가는 것 보면 탄도 장착된 게 안 보이던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B-1B라든지 B-52 폭격기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그것이 큰 어떤 함의를 갖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억제능력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경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보면 조약 당사국은 비상사태로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 조약에서 탈퇴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서 이미 소형화, 다중화, 표준화해서 스커드·노동·SLBM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엄중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대수 의원** NPT 탈퇴 과정에는 한미 동맹 문제도 있고 국제사회 관계도 있어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주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우리 자국의 역량과 국제 역량을 모아서 대응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지금 당장 우리가 핵을 갖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우선 응급처방으로 우

리 지역에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배치해야 될 상황이 지금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견해가 많습니다.

총리님,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한미 동맹에 또 국제사회의 협력에 반영이 되어서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사드의 유해성, 전자파라든지 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러한 논쟁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대북 제재와 그리고 우리 핵 방위능력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의원**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내키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지금 아니냐, 이와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총리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검토가 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민들의 여러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의원**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찬성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 국방의 의무는 어떤 책 속의 의무가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역을 함께해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병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확보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경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를 출신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북구를 출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은 역대 최강이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이행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네 번째 핵실험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만 무려 세 번째 핵실험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안보 무능 정권, 규탄과 제재만 반복하는 아무런 실효적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정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왔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연 이틀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예, 감사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정부에서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정책적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갔습니다.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2270 결의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8개월이 지난 지난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끝장 결의라고 했습니다. 2270 결의안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썬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명백히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우

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자원의 준비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또 2013년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을 취해야 될 일이다, 대화와 협력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많은 기간 동안, 무려 이 정부 들어와서 세 차례나 핵실험을 방기했다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판단 잘못과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이 핵실험을 2013년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 도발을 한 것입니다.

○**최경환(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무총리 황교안**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될 측면은 북한입니다.

○**최경환(국) 의원** 맞습니다, 북한도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에 와서 세 차례 핵실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북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탓 하시겠습니까?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셔야지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 당시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바로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때로 따진다면 지금 세 차례 핵실험, 여기에 계신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세 분 전부 물러나거나 총리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질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

려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또 금년 두 번, 갑자기 핵 도발이, 핵실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상태로 대북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북한이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유엔 안보리 제재, 대북한 제재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항복을 받아 내는 것입니까, 북한의 붕괴를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화와 협상, 예를 들면 6자회담과 같은 대화에 북한이 나오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이 핵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최경환(국) 의원** 총리께서는 혹시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2270 결의, 올 초에 유엔에서 통과된 결의,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2270 결의 이행을 위반했다 이런 생각은 해 보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정부가 위반했다는 말씀입니까?

○**최경환(국)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2270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국제사회가 이 제재에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의원** 총리께서는 2270 결의 중에 49조와 50조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환(국) 의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9조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50조는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6자회담 공약을 준수한다, 지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2270 결의에는 제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49조와 50조와 같은 대화를 한다, 대화를 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2270의 내용은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조항 중에……

○**최경환(국)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9조는 대화를 통한 해결, 50조는 6자회담 복귀 노력을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재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많은 조항 중에 그 두 조항을 볼 것이 아니라 2270의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2270입니다.

○**최경환(국) 의원** 2270 어느 조항에도 총리께서 또 우리 정부가 인식하는 것처럼 ‘제재가 먼저다, 대화는 나중에 한다, 북한이 핵 폐기하면 대화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로지 제재만 생각하고, 제재만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대북 확성기 트는 일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그 두 가지 외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대화로 대화를 어떻게 이어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오로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등 자멸할 것이라는 등 이런 공격적 발언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는 우리 정부 역시 2270 결의안 49조와 50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에 많은 2270의 조치들 중에서 어떤 특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부가 잘못했으니 정부가 손 내려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통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북 정책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제재를 해야 될 국면이고, 이런 전체적인 대북의 기조는 우리 한국이 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 조치입니다.

○**최경환(국)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70 결의안은 제재를 위한 결의안만은 아닙니다. 제재의 각종 항목들이 있고 또한 대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라는 그런 항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패턴, 즉 규탄 또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대화 배제 또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수단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 한계가 있는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러면 사드 배치도 내려놓고 패트리엇 내려놓고 단지 대화만 하면 되겠습니까?

○**최경환(국)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재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그러나 경제 제재나 사드와 같은 군사적 옵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25년에 가까운 북핵 역사를 돌아봅시다. 신뢰가 최악일 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논의될 때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북·미 대결이 최고조일 때 9·19 공동성명이 합의되었습니다.

제재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멘텀, 대화와 협상의 길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와 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정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는…… 지금 북한에서 금년 들어서만 두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 국면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제재 국면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여든 야든

모든 국가의 역량들을 모아서 이 방향으로 좀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쳤던 이런 것들을 다시 밟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재 국면, 제재 국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제재와 함께 대화의 길을 찾는 것, 이 병행전략으로 갔을 때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차관님,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유엔 총회에 가 계십니다.

○**최경환(국) 의원** 차관님, 아까 총리님께 여쭙었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 6월 1일 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2270 결의와 관련한 이행보고서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최경환(국) 의원** 이 문서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최경환(국) 의원** 제가 쪽 읽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49조 대화 해결 노력, 50조 6자회담 복구 노력, 여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화를 위해서, 이 2270 결의의 49조·50조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아무 증거를 갖고…… 이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2270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 서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2270의 기본적인 주안점은, 그 많은 조항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 2개 조항만이 대화를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재에 방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경환(국) 의원** 아니, 2개의 조항밖에 없어서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국) 의원** 그러면 좋은 조항만 찾아서

해석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유엔이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단 숲을 보고……

○**최경환(국) 의원** 다 병렬적이라고 봅니다, 병렬적. 50여 개 조항이 각자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조항만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러나 모든 대화에도 다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또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그러한 평가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밀 접촉이든 간접적인 대화든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 수재, 이 수재 지원 문제를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통일부는 지금 북민협의 대북 접촉을 불허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 이번 수재 지원을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화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교부의 입장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외교부의 입장도 그 문제에 관한 한은 통일부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말에 북한이 수재를 당했는데, 그리고 9월 9일 날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낭비하지 않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인도적 대북 수해 지원이 2270 결의에 위배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인도적 지원은 물론 2270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최경환(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북핵 피로증은 우리만 아니라 미국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접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사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 제재를 넘어서 협상을 하자’, 협상이 필요하

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이 대북 제재 조치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대강 봤습니다.

○**최경환(국) 의원** 최근에, 아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샘 닐슨 상원 군사위원장 그리고 마이크 밀런 전 미국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든 미국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하자. 즉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중간 단계인 핵 동결 협상을 착수하자. 동시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수정하자.’ 이런 구체적인 대북 협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엇그저께 유엔에 가 계신 윤병세 장관도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을 때, 존 케리 국무장관도 핵 동결을 언급했습니다. 대화의 지를 천명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 조야에서 또 정부 내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협상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미 측이 얘기하는 대화도 올바르게 또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항상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다 밑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국) 의원** 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질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회담이 열릴 때 우리 외교부 직원들은 그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협상 결과 36억 불이라고 하는 경수로 부담금만 우리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 변화에도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핵무장을 하자’, ‘전술 핵무기를 반입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무장론은 한마디로 미국의 핵우산을 접자, 한미 동맹을 깨자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성을 또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지, 과연 핵무장론과 한미 동맹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의 엄중함을 걱정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국) 의원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무장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장들은 정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자살골을 넣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겠습니까?

이번 정세균 의장님과 3당 원내대표 미국 방문, 참으로 훌륭한 의원 외교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반입, 선제타격론에 대해 ‘웬 뜬금없는 소리냐’ 하면서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우려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1994년 일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펜타곤이 북한의 핵시설로 의심되는 영변에 외과적 수술 방식의 정밀 폭격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일정 지역에 대한 정밀 폭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개전 3개월 안에 미군 5만 2000명, 한국군 49만 명, 민간인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남북의 산업시설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총리님, 선제공격은 전면전입니다. 공멸입니다.

과연 선제공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환(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희극 배우답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40대 이상만 나가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전쟁을 쉽게 결정해서 젊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군비 경쟁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탈냉전 이후 유례없는 군비 경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의 끝은 전쟁입니다. 군비 경쟁의 폐달을 멈춰야 합니다.

안보 불감증도 문제지만 평화 불감증이 더 문제입니다.

최강 제재, 끝장 제재라고 평가했던 2270 결의 이행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세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제재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재와 대화라는 병행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화의 상징 도시 파주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지구화·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때

로는 협력을 때로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AIB 설립 등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에 장기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논의 끝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한반도에는 신냉전의 구도마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에서는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이 있다는 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정보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요,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본이 자체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고 또 일본과 미국은 동맹으로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 온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정 의원** 장관님, 그러면 한미 간에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 간에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긴밀하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 의원**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미 관계의 정보 공유가 더 긴밀하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위협을 받는 게 한국군이고 또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 정보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게 정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9월 9일 이전에 핵실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도 그 이전 한 7월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언제든지 지도부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말씀해 왔습니다.

○**박정 의원** 관련된 정보를 또 미국에서 받기도 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 군·정보 당국은 아주 1일 또는 주간 또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으

면 그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청와대나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보고하거나 전달했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저희들이 군사정보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께서는 국방부 등 정보 당국으로부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거나 전달받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북한 관련된 정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공유하고 있다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박정 의원** 9월 9일 오전 핵실험이 임박했는데 장관께서는 서울에서 가깝지도 않은 강원도 고성으로 행사 축하하러 가시고 계셨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행사 축하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고성군민들이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추석 전에 가서 좀 위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협력 사항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박정 의원** 그러니까 고성 가신 것은 맞는 거지요, 고성 가신 것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고성으로 가던 중에……

○**박정 의원** 가시다 오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박정 의원** 일본 언론에서 풍계리에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9월 7일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대부분 서울에 있었고요.

○**박정 의원** 아니, 9월 7일 날은 유라시아 도시 포럼이라는 데 참석해 갖고 축하하셨잖아요, 해운대 가서 갖고. 그 일정 하나밖에 없던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해운대에서 있는 행사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후예요.

○**박정 의원** 하여간 PPT 잠깐 띄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의 이 5차 핵 실험에 대한 대응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7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용표 통일부장관께서는 해운대 가서 갖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이러한 식의 축사를 하셨고요, 일본은 언론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9월 8일 날 라오스 일정을 다 수행했고요, 9월 9일까지 계셨지요. 그리고 아베 총리는 바로 그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도 세종에 가셨고 그다음에 또 청주시장인가, 전통시장 들르시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그……

○**박정 의원** 아까 정보를 공유하신다고 그랬는데 북한의 건국기념일이기 때문에 9일 날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보를 공유했다는, 국방부장관도 분명히 통일부장관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운대 가고 고성 가고 또 세종시내라고 그러면서 NSC 회의를 그만큼 늦게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NSC 회의가 늦게 열린 것은 그것 때문에 늦게 열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박정 의원** 일본은 1시간 만에 열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일본하고 저희하고의 입장은 다릅니다.

○**박정 의원** 우리는 당사국, 당사자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당사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아서 회의 할 필요가 있었어요.

○**박정 의원** 아니, 회의를 빨리 열고서 자료 갖고 오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다음에 일본 등 언론에서 핵실험 가능성, 미국의 언론이나 연구소 그런 것들은 늘상 여러 번 나오던 것들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언제 누를지를,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예측은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가능성

은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고성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또 북한의 핵 위험성을 알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지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 놓고 또 저희가 필요한 그런 역할과 저의 임무를 수행해 온 것입니다.

○**박정 의원** 자, 국민들이 보실 거고요.

저는 이런 행보를 볼 때 국방부하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통일부가 왕따당하거나……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정 의원** 아니면 알고도 장관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정 의원** 국민이 판단하시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겠습니다.

○**박정 의원** 조금 전에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님이 안보리 제재 결의 2270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인도적 차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같이 협력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뭘 얻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2270의 핵심 내용이 뭐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2270의 핵심 내용은 비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재들을 망라한 것이고, 거기에는 의무조항도 있고 꼭 해야 될 조항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어떤 추천조항인데, 아까 표현에도 나왔습니다. ‘welcome a dialogue’라고 돼 있고, 그래서 대화나 이런 것들도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환영한다라는 것이고요.

9·19 공동성명이나 6자회담도 목적이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6자회담은 죽었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 의원** 비핵화의 목적이 2270인 것은 맞는데 그 전에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은 계속 있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박정 의원** 그리고 이 2270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유엔 역사상 비군

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맞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루프홀(loophole)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촘촘히 채워 나가서 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사회와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그래서 여쭙 보겠습니다.

8월 8일 중국 해관총서에서 낸 무역통계를 보면 중국과 북한의 교역물 규모가 지난 몇 달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지 않습니다. 4월부터 줄어들다가……

○**박정 의원** 4월·5월 줄어들고 3월하고 6월하고 증가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6월에 잠깐 늘었다가 7월에 다시 축소됐습니다.

○**박정 의원** 증가폭이 커졌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7월에는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박정 의원**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철·철광석 수출은 3·4월에 모두 상승했고, 중국 항공유 판매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리 결의안 2270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철·철광석 등의 수입과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래서 철광석, 특히 석탄 같은 것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철광석은 석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인데 철광석 가격 등의 영향으로 잠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박정 의원** 변동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 사이의 교역이 안보리 결의안 2270에 대한 위반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교역에 안보리 2270에서 민생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위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차 핵실험 직후에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신규 대북 압박조치에 민생 목적의 교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으로 기존에 2270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제재로 더 촘촘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유엔 정신에 비추어서 이런 인도적 목적, 민생 목적의 교역까지는 제재하기 힘들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2270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관련 예외조항과 인도적 지원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문제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9월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장관)하고의 통화에서 이런 의도를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대북 제재의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이 참여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런 민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재를 안 하면 우리가 계속 압박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중국 정부도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표출했고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수상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확인됐고, 그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또 여러 다자회담에서의 결의안 등에 중국의 의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그러니까 듣는 채널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중국 쪽으로 듣는 채널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어쨌든 4차 핵실험 이후에 대통령께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를 바로 시도했는데 연결이 됐습니까, 바로?

○**통일부장관 홍용표** 조금 시차가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그러면 5차에서는 시도하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직은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아니, 5차 핵실험이 이렇게 일어나고 중국의 관계가 중요한데 시도를 안 하셨다는 것은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그전에도 EAS 회담 등을 통해서 또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정상 간의 통화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한중 간에는 이런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견의 차이가 없고 또 현재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나중에 따져 보지요.

이번에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월 10일 날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고, 11일 날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123개 입주업체 현지 법인장들한테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철수하라고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도록 그때 그 조치를 내렸고요. 다만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한 한 빨리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물자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일 오후 저녁 때 5시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북측이 무조건 빨리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나가라고 그래서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날 밤늦게 모든 인원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박정 의원 그렇지요? 원래는 11일부터 북한하고 협의를 시작하고 13일 날 철수할 계획이었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철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쨌든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능한 한 차분하게 철수를 시작했고 다행히 신변의 별다른 문제가 없이 모두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 의원 장관님, 개성공단 중단과 철수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박정 의원 주요 내용이 뭐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주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북한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들을 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매뉴

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 의원 신변안전이 중요한데 거기 매뉴얼에 보면 북한이 우리 자산을 동결하는 즉시 전력·용수·통신 등의 기간시설은 물론이고 공단 내 기업의 기계와 설비 등에 대해서도 불능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철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2월 11일 날 철수가 이루어졌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래서 필요한 불능화 조치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원이 내려온 즉시 전력과 용수 등을 다 차단하였습니다.

○박정 의원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은행도 13일 날 철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가 11일 날 갑자기 철수하는 바람에 들어가서는 PC 간신히, 서버 간신히 갖고 나온 것은 좋은데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PC나 이런 것들 못 갖고 나왔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고 북측에 그것을 통보하고 우리 인원은 물론 우리 인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안전하게 가져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지만 북한이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전면 폐쇄 그다음에 모든 인원이 나가도록 하고 또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박정 의원 그러니까 예상 못 하고 이런 일어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상을 못 한 게 아닙니다. 다 예상을……

○박정 의원 13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11일 날 나가니까 철수를 제대로 못 한 건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업들이 좀 더 시간을 달라 그리고 물자를 빼내 올 수 있는 차를 더 올려 보내게 해 달라 했지만 북한이 이미 2013년에도 유사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설득해서 최소한의 차량이 들어가서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갑작스러운 통보를 했을 때 별다른 사고 없이 신변을 안전하게 챙기면서 모든 인원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정 의원 신변안전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손실 아닙니까, 경제적 손실? 기업들이 1조 5000억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업들이 당시에 원부자재와 완제품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을 가장 신경 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협조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변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제한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놓고 온 원부자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피해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고, 기업들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해 오고, 지금 한 90% 이상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신청했는데 자기네들 예상한 것의 한 27%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장관님,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어떤 기업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개성공단 내에서 식자재를 판다든지 건설업을 한다든지 어쨌든 실제로 제조업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영업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초기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언급만 있고 영업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업기업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우선 급했던 것이 입주기업들이었고, 특히 입주기업들만 기업대표자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랑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만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진 즉시 영업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도 직접 영업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박정 의원** 파주 다녀오셨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공장도 가 보면서 입주기업과 똑같이 동일하게 피해 지원 조치를 즉 추진해 왔습니다.

○**박정 의원** 한번 따져 봅시다.

2월 11일 날 영업기업 사람들은 몇 명이나 개성공단 들어갔다 나왔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체크는 하지 못하겠고요.

○**박정 의원** 한 명도 안 들여보내셨어요, 영업기업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할지 저희가 예상 못했기 때문에……

○**박정 의원** 입주기업은 들여보냈잖아요, 243명.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도 크기에 따라서 진짜 규모가 큰 기업은 트럭 2대, 작은 데는 트럭 1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상황에서 그래도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원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영업기업은 그 안에 원부자재나 완제품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주기업부터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정 의원** 성실하게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하신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같은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박정 의원** 그러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실제 건물하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게다가 통일부 직원들도 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자기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서 갖고 오라고 이렇게 웃지 못할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기업의 특성상 모든 자료가 다 개성공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보내 주지도 않고 자료를 갖고 와서 제출하라는데, 계속 증빙자료만 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당시 상황이 개성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낸다면 그런 것들은 다 받아서 인정을 했습니다.

○**박정 의원** 몇 군데나? 66개 영업기업 중에서 28개사, 실체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 푼도 피해보상을 못 받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일부 기업들이 소위 말하면 자료가 없이 거래를 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박정 의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아까 그런 건

물이 있는 기업도 피해보상을 못 받았는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더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료가 조금이라도 근거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했구요.

다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이것도 어떤 절차와 이런 여러 가지를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데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박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들여보냈으니까 자료를 못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북한이 일단 모든 통신선을 다 끊었고요 들여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 의원** 아니, 장관님…… 그날 말이지요, 11일 날.

최소한 전략물자는 통일부 승인을 받고 반출하잖아요? 그러면 통일부 내부 자료가 있는데, 그것 열람만 해도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내부 자료건 외부 자료건 아니면 관련 기업,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든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들을 다 활용해서 검증하고 인정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박정 의원** 10일 만에 다 검증하셨는데, 그 얘기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1일부터 3일까지 피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그래서 1일 날 신청하신 분들은 이들의 여유가 더 있었고 3일에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불평등도 있었을 뿐더러, 왜 그러면 3일부터 10일까지 더 연장을 하셨습니까? 3일까지 다 끝내기로 해 놓고.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가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개인적인 민원 들어온 것들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휴일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 전반적으로 취지 자체가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고려해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감 기한도 연장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원칙과 형평성 등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기업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박정 의원** 그 ‘최대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66개 기업 중에서 28개가 활동한 게 있고 다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증명해냈는데 그것 다 무시하고 한 푼도 지원 안 한다는 거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지원한 게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도 영업기업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직접 공장도 찾아가 보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고요 또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도 해 주고 싶어도 근거 자료가 없어서……

○**박정 의원** 전략물자 반출한 것에 대한 자료 내부적으로 있으시잖아요, 그것 보시면 돼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 의원** 13년에 개성공단 잠정 폐쇄됐다가 다시 열렸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박정 의원** 이때 남북 정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업이 활동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겠다. 단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믿고서 입주기업이나 영업기업이나 들어가서 영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시겠지요. 핵심협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치면 피해를 본 거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자꾸만 ‘최대한 보상을 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66개 영업기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120개 입주기업이 있고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8000명입니다. 그리고 5000개의 관련 협력업체가 있는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일터를 잃고 추석 명절도 제대로 못 쇠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칙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애민정신으로 충분히 자료를 찾고 도와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은 정말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최근까지도, 아직도 계속 틈만 나면 관련 기업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내놓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들, 또 행정적 지원들, 애로사항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또 더 챙겨 볼 것들은 더 챙겨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99명을 구제하는 것보다 1명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만큼 절실한 것이지요. 진짜로 이것은 통일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아직도 계속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그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확인을 하고 가능한 조치들이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2의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5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는 한미일 삼각공조만으로는 북한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국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 차원의 대안 마련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국제평화공단의 조성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군사적으로 긴장과 대결의 무대였던 접경지역에 북한 개성공단에 대응하는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개성공단과 달리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평화공단

은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을 만드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37억 달러나 출자한 AIB 자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주국제평화공단은 남북한의 협력 수준을 넘어 진정한 통일시대를 여는 절묘한 한 수가 되어 줄 것입니다.

OECD는 2013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은 일인당 GDP 8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예측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통일 한국 평화경제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적·정치적 선진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살 길이라고는 핵무기밖에 없어서 주민이 굶어 죽든 말든, 홍수가 나든 말든 오로지 핵으로 승부를 보자는 북한이 비정상인가? 머리에 핵을 이고도, 현실로 닦친 핵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손을 놓고 탁상공론만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비정상인가? 현실 부정도 이런 현실 부정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좌파 정부 10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했습니다. 아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보수정권 10년이 핵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대북 강경노선이 핵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적반하장에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

는 것입니다.

대북 강경노선이라고요? 과연 우리가 북을 향해 강경노선을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지금 북한의 핵이 사라졌거나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왕조가 무너져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따뜻한 해방을 맛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 악성국가에 끌려다니는 그런 수준입니까?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평화, 민족, 통일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비굴한 평화라도 평화라면 좋다', '같은 민족인데 설마 우리를 쏘겠느냐' 이런 요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는 공격의 틈만 보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과 같은 허울 좋은 말들에 끌려다니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교육이, 언론이, 문화계가 나서서 이런 풍토를 조장하고 있고 정치권의 모습도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핵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가 가르쳐 준 진실입니다.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1 덕목, 그 사실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명한 명제들 앞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무엇을 약속해야 하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확인코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께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핵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핵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 핵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핵무기라는 절대무기 앞에서 킬체인, KAMD 이것 재래식 무기체계일 뿐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 지킬 수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킬체인 말씀하셨고 또 KAMD 말씀하셨습니까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어제도 총리님께서서는 또 오늘도 총리님께서서는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비핵화의 원칙을 지켜 가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지금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 대응은 한미일 외교부장관 공동성명,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전 등에 그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문제가 좋게 말하면 국제 공조, 나쁘게 말하면 외교적 사안의 하나쯤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한미 동맹에 우리가 우리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미 동맹 정말 굳건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동맹에만 우리가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독자적인 체제와 대응 시스템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KAMD 자체가 우리의 자체 방어체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어체계와 한미 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들이 지금 집결되고 있습니다. 집중돼서 대북 체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님, 자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의 최고의 가치는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어제도 북한은 미 대륙을 향해서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실험을 했다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는 과거의 우리의 혈맹 미국, 우리의 한미 동맹은 북핵의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핵이든 무엇이 됐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말하는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전술핵 배치도 선을 긋게 하는 그런 미국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된 확인이 있었고 또 미국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대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희경 의원 저는 총리님이 인식하시는 한미 동맹의 강도와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동맹을 한없이 불신하고 흔들려 온 운동권적 반미의식, 우리 스스로조차 위협을 위협으로 절감하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가 부른 미국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변화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북세력들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잘못된 노력들을 해 왔고 그렇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또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대처해 가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그런 중북세력 등의 어떤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지금 한미 동맹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더 굳건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의원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한미 동맹은 확고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미국 국민, 시민들이 수없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나가면 한미 동맹의 큰 우려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 보수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핵 위기를 촉발시켰다, 핵실험을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총리로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도발,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저는 보수 정부의 강경노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고한 관광객이 희생당한 이후에 금강산 관광 중단, 우리 근로자가 생으로 인질이 되거나 저들의 돈줄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중단, 46명의 우리 고귀한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 간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 조치, 이것이 무엇이 강경노선이라는 것입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상 국가, 이성 국가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북핵 앞에서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북의 변화, 북한 붕괴를 위한 강경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강경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안으로부터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핵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핵은 통일이 되면 곧 우리 민족의 전력이 된다’ 총리께서는 이런 주장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주장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근거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희경 의원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자 요설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총리님은 그 연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주장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그렇게 얘기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오랜 뿌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또 구체적인 조치들도 취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단호하게 대처해 가고 바로잡아 가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님께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이것은 2001년도 전교조가 통일 교육에 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만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일종의 교사용 참고서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남북 화해의 걸림돌로 표현하고, 남북한 간 체제 비교를 하지 말고 자주적 민족 통일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선생님들에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6·25 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이나 아니냐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자료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봤습니다.

○**전희경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옳지 못한 자료입니다.

○**전희경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이런 교사한테 교육받은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허리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의 허리 일을 맡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걱정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의 미래도 생각하고 우리 안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부 세력들이 학생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그들의 생각을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대응을 해 오고 있고, 그것이 교과서로부터도 아마 출발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경 의원** 좋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자유학기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전희경 의원** 자유학기제 잘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금년에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전희경 의원** 잘 되고 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금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제가 자유학기제 실상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입니다.

작년 광주교육청에서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활용하라면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학생들에게 놀이를 통한 수업을 하는데 딱지의 양면을 통해서 전쟁이나 평화냐, 분단이나 통일이나, 무기냐 복지냐, 이분법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축’이라는 딱지로 딱지를 쳐서 ‘전쟁’이라는 딱지를 이겨서 뒤집으면 ‘평화’가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이런 사고가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 총리께서는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전국 중학교에서 모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험운동을 하고 있었고 금년에 본격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 현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유학기제 현장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자유학기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당국과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님께서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17개 시·도교육감들 중에 13명이 친전교조 교육감입니다. 낙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학기제 자체는 많은 검토를 거쳐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갖게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정책 속에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전교조 이념 편향 교육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역사교육의 정상화, 모든 것들을 비틀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 뒤에 숨은 방종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치라는 허울을 접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도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의 논란 그리고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또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직선제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경 의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총리님,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봤습니다.

○**전희경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학생들과 같이 가서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가서 봤는데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봤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바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또 꿈과 끼를 키워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전희경 의원** 맞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전쟁사에도 길이 남을 위대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영화평론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반응과 얼마나 달랐는지 총리님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영화평론가들 중의 일부가 여러 가지 또 사실과 다르다고,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또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른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왜곡이나 부당한 폄훼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제가 몇몇 극단적인 평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역행한 작전’ ‘반공주의와 영웅주의로 범벅된 영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희경 의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이런 것들이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어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도 우리 민족의 핵이니까 결국 우리 거다’ ‘우리를 쏜다니 무슨 말이나? 미국이 겁먹어야지 우리는 아니다’ 이런 말들이 상식처럼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거 책임지고 막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좋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핵무기에 대한 해법은 불행하게도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니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핵을 보유한 나라들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핵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지도를 펴 놓고 이 세계 어느 곳에, 단 한 곳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어디일까 찍어 보라 하면 저는 주저 없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찍겠습니다. 왜? 이토록 호전적이고, 이토록 비정상적이며, 이토록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핵무장과 핵 위협을 하는 그런 집단과 맞서고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불량집단·세습왕조, 김정은의 핵은 폭력이며 반인류이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핵은 이성이며 상식입니다. 그야말로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곧 우리의 운명이며 미래 세대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좌파와 햇볕정책의 주역들에 의해 오도된 민족·평화·통일 이런 말들에 간혀 끌려다니는 동안 우리는 북핵 앞에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에 가려진 진실을 이제 꿰뚫어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진실을 알려 줘야 합니다.

국회부터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시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초선 의원인 저는 교육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설마' 하는 허상에 간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통해 번영한 대한민국을 흡수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이미 오래전 북한 주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우리 것이 된다'.

변해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지가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전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

**안에 대한 수정안(김관영 의원 등 30인 발의)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0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부 겸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찬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회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옥	민 병 두
민 흥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우	박 흥 근	백 승 주
백 재 현	서 영 교	서 형 수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송 기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용 현
안 규 백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엄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완 영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우	이 철 회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현 회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진석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중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3인)
 김종대 김종희 심재권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욱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중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대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출석 의원(287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희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개의 시 재석 의원(182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금태섭	기동민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병관
김병기	김부겸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찬
김승희	김영우	김수민	김순례
김영호	김정우	김영주	김영춘
김종석	김종인	김정재	김종대
김진표	김철민	김종태	김종회
김한정	김한표	김태년	김학용
김현미	김현아	김해영	김현권
문희상	민병두	문미옥	문진국
박남춘	박대출	민홍철	박광온
박병석	박선숙	박덕흠	박명재
박영선	박완수	박성중	박순자
박재호	박정	박완주	박용진
박지원	박찬우	박주민	박주현
백재현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손금주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송옥주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안상수	신보라	송기현	심재권
어기구	안철수	신용현	양승조
오신환	엄용수	안호영	오세정
위성곤	오제세	염동열	원유철
유의동	유동수	우상호	유성엽
윤영석	유재중	유민봉	유소하
윤한홍	윤영일	윤상직	윤종필
이만희	윤호중	윤재옥	이동섭
이원욱	이명수	윤후덕	이용주
이재정	이은권	이완영	이장우
이채익	이종명	이은재	이진복
이춘석	이철규	이종배	이철희
이현재	이태규	이철우	이현승
임종성	이훈	인재근	임이자
전희경	장석춘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갑윤	전현희	정병국
정유섭	정세균	정동영	정운천
제윤경	정인화	정용기	정태옥
조응천	조경태	정진석	조원진
주승용	조정식	조배숙	주광덕
천정배	주호영	조훈현	채이배
최연혜	최경환(새)	지상욱	최명길
한선교	최도자	최인호	표창원
홍철호	최운열	최인호	홍익표
	한정애	함진규	
	황영철		

○속개 시 재석 의원(65인)

강병원	강석진	경대수	곽상도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도읍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金成泰	김세연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석
김태년	김학용	김한표	문진국
박경미	박맹우	박병석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박준영	박찬대
박찬우	배덕광	송기현	송석준
신동근	신보라	심재권	심재철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원유철	유동수	윤상직	윤상현
윤후덕	이완영	이은권	이진복
이철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정동영	정유섭
조응천	주광덕	최명길	최운열
홍익표			

○산회 시 재석 의원(86인)

경대수	곽상도	권미혁	김경협
김규환	김도읍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상희	金成泰	김순례
김승희	김영호	김정우	김종석
김종회	김중훈	김진태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문미옥	문진국
민경욱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선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서형수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위성곤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윤영일	윤재옥
윤호중	이동섭	이만희	이양수
이완영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현승	이현재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유섭
정인화	정진석	정태옥	조승래
주광덕	진선미	최도자	최인호
함진규	홍문표		

○청가 의원(9인)

강길부	강효상	김삼화	심상정
우원식	이정미	이종걸	정춘숙
하태경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우윤근
입법차장	진정구
의사국장	권영진

김병기 · 김중로 · 노웅래 · 천정배 · 김삼화 ·
홍영표 의원 발의)

9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박용진 · 제윤경 · 민병두 · 김해영 ·
박광운 · 심상정 · 김관영 · 이철희 · 최명길 ·
김종민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노웅래 · 어기구 · 주승용 · 전해숙 ·
손혜원 · 강창일 · 박정 · 장정숙 · 조승래 ·
김두관 의원 발의)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정병국 · 황영철 · 박덕흠 · 조훈현 ·
김성태 · 조원진 · 정운천 · 김정재 · 홍철호 ·
홍문종 의원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유은혜 · 조정식 · 김현미 · 박경미 ·
전현희 · 김성수 · 안규백 · 안민석 · 정성호 ·
윤후덕 · 김민기 · 정동영 · 김병욱 · 박정 ·
송옥주 · 이훈 · 도종환 · 이용득 · 유승희 ·
김태년 · 최도자 · 김영주 · 박광운 · 송기현 ·
민병두 · 김한정 · 어기구 · 한정애 · 강훈식 ·
윤관석 · 문미옥 · 강병원 · 이재정 · 박완주 ·
우원식 · 이원욱 · 유동수 · 남인순 · 김부겸 ·
백혜련 · 김철민 · 소병훈 · 정재호 · 권미혁 ·
조승래 · 설훈 · 기동민 · 조응천 · 윤소하 ·
제윤경 · 이정미 · 김종민 · 이인영 · 정춘숙 ·
김경수 · 오영훈 · 표창원 · 박찬대 · 송영길 ·
김상희 · 강창일 · 김병관 · 홍익표 · 위성곤 ·
신창현 · 이철희 · 노웅래 · 임종성 · 전해철 ·
김해영 · 박재호 · 심재권 · 홍영표 · 김종훈 ·
이해찬 · 고용진 · 전해숙 · 인재근 · 황희 ·
김영진 · 이춘석 · 이석현 · 변재일 · 전재수 ·
신동근 · 박영선 · 신경민 · 이학영 · 윤종오 ·
진선미 · 심상정 · 최인호 · 김병기 · 오제세 ·
손혜원 · 추미애 · 박홍근 · 이찬열 · 권칠승 ·
서형수 · 김진표 · 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2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 9. 20. 정부 제출)